

# OECD 환경정책과 우리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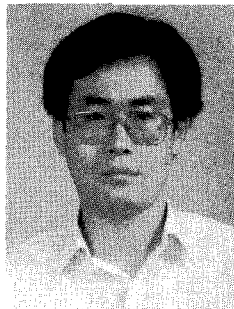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에 한걸음 바짝 다가섰지만 누리는 지위만큼 각종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됐다.

특히 우리 경제력에 비해 가장 낙후된 부문의 하나인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통분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움직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력의 시장확대와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논의는 WTO를 중심으로 OECD, 유엔환경계획(UNEP),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TAD)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고급제품을 만들어내도 그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되면 수출의 길이 막히는 때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들의 환경정



연성주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OECD의 선진환경정책동향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 보면**  
이제는 환경정책이 산업공해처리와 같이 좁은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세제와 같은 세제개혁, 고공, 소비패턴, 산업경쟁력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책에 대해 논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선진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이라는 복병을 만나 뒷걸음질치고 있는 국내환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환경전문가들은 경기가 불황일 수록 오히려 환경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고삐를 늦출 경우 한번 완화된 규제는 되돌릴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낙동강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위천공단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기본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및 예치금을 인상하려다 본래의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한채 주저 않는 아픈 경험을 했다. 기업과 경제부처들이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환경부는 결국 손을 들었던 것이다.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진 환경정책의 첫번째 과제는 경제와 환경정책의 통합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산업공해나 오염물질의 처리문제를 다루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이유가 현재의 자유시장 가격구조가 환경비용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특

정제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비용이 제품의 제조원가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모든 환경정책 또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따로 구분될 수 없으며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두 정책의 통합과 함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환경세의 도입을 통한 세제의 개혁이다. 국내에서는 환경세라고 하면 방위세나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세는 이와는 전혀 상이하다. 과거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전제하에 세제가 소득세 위주로 편성돼 있지만 OECD에서는 「공해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해 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세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는 세제개혁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환경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환경은 과도하게 남용이 되는 반면 사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실업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를 도입해서 환경의 가격을 높여주고 소득세를 감면해서 사람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환경을 보전하고 고용도

증대하는 일석이조 효과(Double Dividend)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이러한 일석이조 효과가 과연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량경제학적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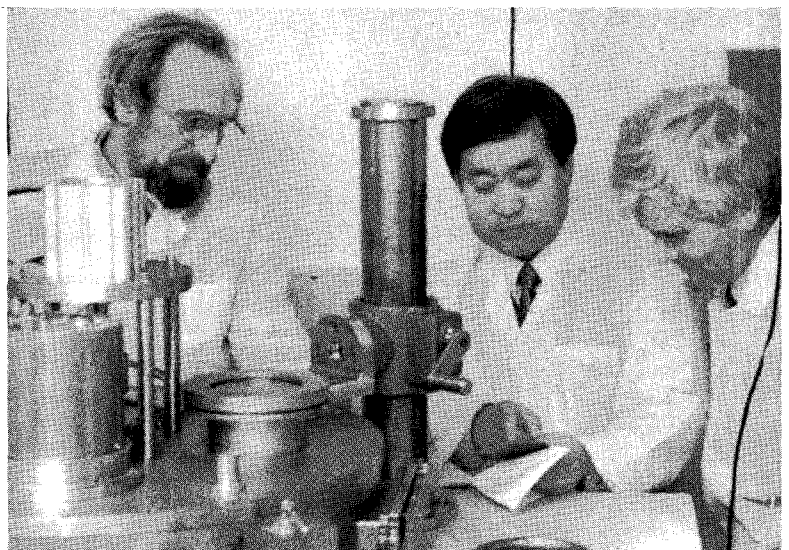
특히 환경세제의 도입은 앞에서 설명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가격구조 조정에 있어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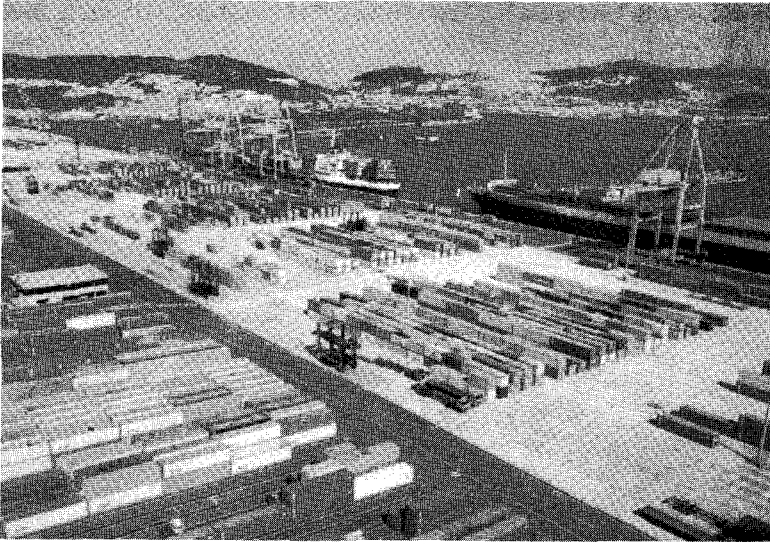
세번째로는 소비패턴의 변화다. 환경오염규제 방식이 당초 정부가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의 배기관에 오염처리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후규제방식을 취하다가 최근에는 생산공정자체를 청정생산공정으로 바꿈으로써 공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과 같이 주로 생산부문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각종 환경기준 등을 통해 규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예민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환경적

으로 불건전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조공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소비패턴 변화위주의 환경보전개념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네번째로는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과의 관계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으나 이제는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새로운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첨단환경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 산업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우리나라가 대체물질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겪은 어려움만 봐도 자명한

▼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새로운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첨단환경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 산업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분석이다.





▲ 환경세제의 도입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가격구조 조정에 있어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들의 그린라운드와 같은 환경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환경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날 미국의 환경기술이 독일, 일본보다 낙후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치다.

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위 그린라운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첨단환경기술의 확보가 환경기준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지 않으면 환경기술의 수요가 생기지 않게

되며 수요가 없으면 기술혁신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은 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킨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오늘날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 이유는 지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빌미로 각종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OECD의 선진 환경정책동향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 보면 이제는 환경정책이 산업공해처리와 같이 좁은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세제와 같은 세계개혁, 고용, 소비패턴, 산업경쟁력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반국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값을 올려야 하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매연의 주범인 경유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맑은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 수돗물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OECD내의 논의결과 명확한 것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높게 책정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절약형 첨단 환경기술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되면서 양질의 환경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빌미로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게 책정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환경기술개발도 부진해서 결국은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작금의 우리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미래의 산업이라 손꼽히는 환경산업의 보호측면에서 볼때도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새로운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수익성이 높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세기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들의 그린라운드와 같은 환경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환경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날 미국의 환경기술이 독일, 일본보다 낙후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